

제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2001. 8. 27.(월)

제 안 설 명 서

【 송리원댐건설계획백지화촉구결의(안)】

서 건 식 의 원

- 서건식 의원입니다.
- 송리원댐 건설계획 백지화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10 , 발의일자는 2001년 8월 17일이며, 발의 의원으로는 본인과 송준우, 조용희, 석동옥, 전병국, 김동조, 강정길, 최인식, 이기찬, 권영하, 이재창의원 입니다.
- 제안이유는,
가. 1999년 12월 정부합동으로 확정 발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신규댐 건설은 필요하지 않으며, 댐 건설이 아닌 물수급관리를 통해 낙동강의 수질·수량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정부에서는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나. 송리원댐 건설은 가뭄해소와 전국적인 물 부족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낙동강 중·하류지역 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북부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댐 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다. 송리원댐은 수몰면적에 비해 담수량이 적고 경제성이 없으며, 낙동강 수계의 최대 지류인 내성천의 황폐화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낙동강의 수질 악화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라. 영주시의회에서는 지난 1999년 송리원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발표후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99. 10. 13)에서 시민의 뜻을 담아 송리원댐건설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한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우리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송리원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송리원댐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1,300만 낙동강 유역민과 약속한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정부의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백지화 하라.

다. 「송리원댐」 건설은 또 다른 환경파괴의 악순환일 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타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철회하라.

라. 수물면적에 비해 저수량이 적어 경제성도 없으며, 낙동강 최대 지류인 내성천 마저도 황폐화시키는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백지화 하라.

마. 1,000여 세대 3,000여명의 생존권과 영주시 100년 대계를 담보한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바. 정부는 90년만에 온 가뭄을 이용한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리원댐건설 계획 백지화촉구 결의문

우리 영주시의회는 1999년 8월 정부의 송리원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시 14만 시민의 뜻을 담은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관계부처에 건의하였고, 2000년 3월에는 의원전원이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송리원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90년만의 가뭄을 틈타 「낙동강유역 가뭄해소와 물 부족문제 해결」이란 명분으로 우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난 6월 30일 저수량 1억 7,970만톤 규모의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영주시의회의원일동은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앙정부의 횡포로 규정하고, 14만 영주시민의 생존권 수호와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다시 한번 「송리원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1,300만 낙동강 유역민과 약속한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정부의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1999년 12월 정부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낙동강 수계에 신규 댐 건설 여부는 「낙동강 물 이용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조사단에서 제출한 “낙동강 수계에는 새로운 댐 건설은 필요하지 않으며 해서도 안된다”는 조사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둘째,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도시의 또 다른 개발을 위하여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의 정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앙정부의 횡포이며,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처사로서 14만 영주시민에게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셋째, 「송리원댐」 건설은 또 다른 환경파괴의 악순환일 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타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철회하라.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댐의 최적운영, 지역별 중·대형 저수지 확대, 수원함량림 조성, 강변 여과수 증대, 지역별 지하수 개발, 중수도 시설 도입, 절수정책, 누수 수도관 교체, 하수종말처리장 및 환경시설 확대 등의 수요관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송리원댐」 건설은 중·하류 대도시의 또 다른 개발의 명분일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수량확보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환경파괴의 악순환일 뿐이다.

넷째, 수물면적에 비해 저수량이 적어 경제성도 없으며, 낙동강 최대 지류인 내성천 마저도 황폐화시키는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송리원댐 건설지역은 담수에 적합한 협곡이 아니고 평야와 같은 농지와 수많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수물면적에 비해 담수량이 매우 적고 그 피해는 엄청나게 많으므로 타당성이 없다. 또한 낙동강 수계 최대의 지류로서 가장 뛰어난 자생능력과 생태계를 보유한 내성천의 황폐화로 낙동강 수질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다섯째, 1,000여 세대 3,000여명의 생존권과 영주시 100년 대계를 담보한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송리원댐 건설은 오직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조상 대대로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3,000여명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생존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며,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에서도 소외되어 낙후된 지역으로 재정자립도 22%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4만 시민이 결집하여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농·축산업의 발전과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이 조화된 문화·관광도시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영주건설」을 위한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해온 우리시의 100년 대계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여섯째, 정부는 90년만에 온 가뭄을 이용한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정부는 물 관리 정책의 실패를 마치 댐이 없어 가뭄이 초래된 것 같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제 물 부족 문제는 새로운 댐 건설이 아닌 그 지역에 필요한 저수지 건설과 「낙동강 물 이용 조사단」에서 제시한 물 수요관리 개선정책을 통하여 해결 할 것을 요구하며 14만 시민의 뜻을 담아 송리원댐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1. 8. 27.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안검토보고서

1. 의안

가. 의안번호 : 제210호

나. 의안명 : 송리원댐건설계획백지화촉구결의(안)

다. 발의자 : 서건식 의원외 10인

2. 제언이유

가. 1999년 12월 정부합동으로 확정 발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신규댐 건설은 필요하지 않으며, 댐 건설이 아닌 물수급관리를 통해 낙동강의 수질·수량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정부에서는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나. 송리원댐 건설은 가뭄해소와 전국적인 물 부족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낙동강 중·하류지역 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북부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댐 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다. 송리원댐은 수몰면적에 비해 담수량이 적고 경제성이 없으며, 낙동강 수계의 최대 지류인 내성천의 황폐화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낙동강의 수질 악화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라. 영주시의회에서는 지난 1999년 송리원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발표후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99. 10. 13)에서 시민의 뜻을 담아 송리원댐건설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를 향의 방문한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우리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송리원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송리원댐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3. 주요골자

- 가. 1,300만 낙동강 유역민과 약속한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정부의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 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백지화 하라.
- 다. 「송리원댐」 건설은 또 다른 환경파괴의 악순환일 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타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철회하라.
- 라. 수몰면적에 비해 저수량이 적어 경제성도 없으며, 낙동강 최대 지류인 내성천 마저도 황폐화시키는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백지화 하라.
- 마. 1,000여 세대 3,000여명의 생존권과 영주시 100년 대계를 담보한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 바. 정부는 90년만에 온 가뭄을 이용한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4. 검토의견

본 안건을 심사한 바, 1999. 10. 13. 제39회 영주시의회(임시회)에서 송리원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 방문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낙동강 수계지류인 내성천황폐화, 대도시 지역주민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요구,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의 전문적인 견해 무시 그리고 자치단체 지역주민과 일절 협의가 없는 등 정부의 독단적인 댐 건설계획으로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송리원댐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 촉구결의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001. 8. 27.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순